

# 여야, 부동산·경제지표 악화 “네 탓이요”

여 “李·朴 정부가 투기 조장”...야 “소득주도성장은 포퓰리즘”  
14·17·18일 일정 10월 초로...19일 청문회도 17일로 조정

## 대정부 질문 첫 날

여야는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고용지표 악화 등 현 경제상황에 대해 남다른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제 악화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두 전 정권의 경제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보수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각종 정책 때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4년 8월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 중소기업 양산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정책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싹쓸이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규

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가 하는 것이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엔 10.9% 더 인상한 것, 산업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환홍 의원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문재인정부 고위직들은 앉은 자리에서 ‘악’ 소리 나게 재산을 불렸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살아보니 강남 살 이유 없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차고 특권의식에 젖어 서민의 삶과 아픔을 짓밟는 발언으로 역대 최고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날선 공방 속에 이날엔 총리는 각종 현안 문제를 해명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이 총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날 실시된 정부분야 대정부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대정부질문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는 14일·17일·18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일·2일·4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인사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19일에서 17일로 조정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영표 “특별법 통해서라도 집값 잡겠다”

민주당 “공급확대·규제 강화 모든 수단 동원” 총력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에 발맞춰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카드를 꺼내 들고 집값잡기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경제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폭등하는 집값을 잡지 못할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특별법 제정을 거론하는가 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생겨날 공간을 신규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여권에서 흘러나온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에 대한 공식 언급도 나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며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투기만을 용납하지 않는다. 투기에 대해 뼈저리게 구멍이 없는지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그린벨트가 등급이

있는데, 3·4 등급 정도 되면 이미 나무도 있지 않고 완전히 훼손된 지역이 좀 있다”며 일부 지역에 한정된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최근 이해찬 대표가 ‘토지 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을 실수요자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태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의 부지를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차분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과도한 주택 대출은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지금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에 무리해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신중히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신규 주택 부지 마련은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이 필요하며 거듭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

## 여 “환영” vs 야 “세금 폭탄”

9·13 부동산 대책 반응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여 향후 관련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의 대책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규제 일반 대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적극 환영하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과 입법 상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9·13 대책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현 대변인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환영하지만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분양3법 없는 공급 확대는 위협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잡자”

비교협단체 대표 연설...“판문점선언 비준 초당적 협력 필요”

민주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 비교협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 추진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고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또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으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

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공중 족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아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의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70년 동안 대결하고 적대했던 시대를 접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길목에 있다”며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당 14명 쇠신 촉구 당협위원장 사퇴

김병준 “임기 1년 철저히 적용... 용단은 고마운 일”

자유한국당 김병준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내 당협위원장 사퇴 움직임과 관련, “당협위원장 임기제를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비대위·원의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명이 임명되면 쪽이 이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협위원장 임기가) 11월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당협위원장이 결의를 보여 주면 고마운 일”이라며 “결의가 당한-당

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해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 14명은 이날 당 혁신 차원에서 당협위원장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재창당 수준의 혁신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통해 “지방선거 패배에 반성하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해 자기희생을 담은 전면적 쇠신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백의중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